

『삼척덕산원전건설후보지전면백지화촉구』 진의문 ('96년 1월 17일 발표)

최근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묶여있던 전국 9개지역중
2~3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원전건설부지에서 넘내 해제시킨다는 정부방침과 관련하여,

우리지역 삼척덕산이 원전건설후보지 해제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10만 시민은 물론,
민간·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첨예하게 확산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삼척 덕산 원전건설 전면 백지화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어떠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고,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우리 10만시민 모두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지역 삼척 덕산 원전건설후보지 전면백지화 촉구진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바와같이,
지난 91년1월 국회대정부질문시, 우리지역 삼척 덕산을 포함하여,
전국 9개지역이 원전건설후보지로 지정되었다는 발표로
원전건설후보지가 표면화된 이래,

그간 우리지역 삼척 덕산의 원전건설후보지 전면 백지화를 위한, 민간단체의 누차에 걸친 건의문 발송, 원전건설반대추진위 결성, 집단궐기대회 개최, 관련기관 방문 집단항의 등, 원전건설후보지 전면 백지화의 뜻을 관철 시키기 위한, 10만시민의 불변의 뜻을 대내외에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의 우리 10만시민들의 이러한 강경한 뜻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지역 삼척 덕산은 원전건설계획이 전혀 없다는 회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원전건설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원전건설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진의를 사전에 파악한 후, 후보지를 최종 확정짓기 위하여, 언론에 원전건설방침을 유포한 후,

대상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관망, 거센 반발이 있는 지역은 원전건설후보지에서 해제하고,

반발이 미온적인 지역은 후보지로 계속 존치시키겠다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출속적인 정부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여론을 관망하는 우유부단한 정부정책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거듭 경고하옵건데, 우리지역 삼척 덕산은,
정부에서 원전건설계획이 현재까지 전혀 없다는 답변이
있었을 뿐만아니라,

입지적으로는, 오염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청정해역으로써,
각종 어족 및 수산물의 보고이며,

광활한 백사장과 산악, 동굴 등 수려한 자연자원이 조화를 이루고,
전국 최고의 해안절경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우리 삼척시에서 추진중인 육상관광지와
해상관광지개발이 완료될 시, 4천만 전 국민의 휴식공간으로써의
여가선용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정해역으로써 각종 어족의 보고, 광활한 백사장, 동굴등,
천혜의 입지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지역에,

국민휴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광개발사업비를
지원하여 주지는 못할지언정, 원전건설후보지로 둑어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원전건설후보지 전면백지화 관철을 위한,
10만 삼척시민의 강력한 반대의지와 개발잠재력이 무한한
입지적 여건을 냉철히 직시하여,

우리지역 삼척 덕산이 원전건설후보지에서 완전히 해제되어,
전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오며,

만약, 우리지역 삼척 덕산 원전건설후보지 전면백지화 건의와
관련하여, 조기에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을시에는,

10만시민, 원전건설 반대투쟁위, 각종 민간. 사회단체와 총연대하여,
범시민운동으로 15대총선 거부, 집단반대시위,
관련기관 방문농성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10만 삼척시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첨언합니다.

1996년 1월 17일

삼척시의회 신상균의장외 14인의원 일동